



## 대한민국 ‘시계제로’, 현재로 넘어간 공… 180일 내 결론

尹 대통령 탄핵가결 ‘직무정지’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가담 혐의 행정부 최장 6개월 가량 ‘마비’ 민주당 “위기국면 극복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현재)로 넘어갔다.

현재는 심판사를 접수받으면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행정부가 최장 6개월 가량 마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탄핵 남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 국회로 국회의장 및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담장을 타고 넘어간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됐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계엄 선포의 후폭풍은 강력했다. 야권은 즉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尹 탄핵’ 외치는 시민들 물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스

국회에서는 연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됐고, 검찰·공수처·경찰이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려 했다는 사실,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사실 등이 속속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단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두 번째로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안’은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차 탄핵안 투표가 가까워지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당내 반발을 샀다. 결국 탄핵안 투표에 12명이 찬성하며 이탈하자, ‘한동훈 지도부’는 불과 수순을 밟으며 여당은 내분에 들어갔다.

반면 170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부터 탄핵까지 정국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가결 관련기사 2·3·4·6면〉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신인도 지킬 것”

최상목 부총리, 긴급 경제장관회의 범정부 움부즈만 TF 가동 ‘신뢰 제고’



총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15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등락 폭이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에 장관급 모임이 소집됐다. 그는 “저희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의 대외 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협안, 공급망 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이재명, 혼란 수습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한덕수 직무대행 탄핵 하지 않기로 “대한민국 위기 조속히 매듭지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외교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 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틀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민변·민주노총 위원장,尹 내란 혐의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사진 뉴시스

▲정유라 “어차피 현재 가면 승리…이 제부터 진정한 보수의 시간”

▲신지호 “친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탄핵안 가결까지 열흘간 국회 지킨 우원식 퇴근…“국민이 함께 해줘 든든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 “취소한 송년회, 차분한 분위기로 재개”

▲행안부,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빈틈없이 연말 안전관리”

/사진 뉴시스